

韓·美關係의 展望

文 大 彈*

目 次

要旨
序
安保·軍事的 側面
貿易葛藤
맺는말

〈要地〉

한국은 對蘇聯 封鎖政策이라는 미국의 世界戰略에서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으며, 韓·美 兩國은 軍事·安保政策에서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공산진영 붕괴와 냉전종식 등 세계정세의 지각변동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의미는 변화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로 인한 國防費 삭감 등 미국의 國內政治·經濟的 요인으로 미국의 東아시아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2000년까지 3단계에 걸친 駐韓美軍을 포함한 東아시아 駐屯美軍의 감축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韓國軍의 독자적 전력 증강과 방위비 분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外交·安保에 관해 한국의 자주성과 국가이익이 부각되면서 韓·美關係는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향해 수정되고 있다.

그러나 駐韓美軍의 전략적 의미가 감소된다고 할지라도 亞·太地域은 미국의 국

* 제주신문사 논설위원

가이익에 있어 경제는 물론 政治·軍事的으로 유럽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바 東아시아에 불안정 요인이 제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 韓·美 안보 체제의 골격은 상당한 기간동안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韓·美관계에서 安保·軍事보다는 경제와 무역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양국간 무역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이 이미 극동지역의 안보를 위해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GNP의 5~6%를 방위예산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안정은 한국의 민주발전은 물론 한·미유대관계를 튼튼히 하는 요건이 될 것이며, 그것은 다시 東아시아 安保의 디딤돌인 것이다.

앞으로 21세기를 향하여 미국의 經濟·政治的 국내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세계적 냉전해소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中國·日本 등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통일 이후까지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미국이 한국의 安保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友好協力 관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통상압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序〉

요즘같은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작은 지방신문의 논설위원이 21세기를 내다보는 韓·美關係의 전망에 관해 발제하는 것이 적에 맞는 일인지 주저된다. 왜냐하면 韓·美關係는 우리에게 단순한 이론적 관심사인 國際關係가 아니라 이 나라의 현실과 체제를 만들어내고 뒷받침 해온 基本軸이기 때문이다.

大韓民國 政府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美國은 유엔을 통해 산파역을 맡았고, 6.25사변을 통해 5만여명의 전사자를 내며 한국을 지켰으며, 막대한 軍事·經濟援助로 오늘을 있게 했다. 또한 가전제품 등 이 나라 總輸出의 30%를 수입하는 미국은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으로서 공업화와 경제발전의 기반이기도 하다. 韓·美關係는 우리의 實存的 문제이며 政策的 과제이지 결코 초연한 理念的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40여년 동안 계속되어온 冷戰時代가 끝나고 국제관계가 多極

화되며 軍事·安保問題 보다 貿易·經濟의 문제가 클로즈업되는 새시대를 맞아 약소민족국가들이 스스로의 活路와 自主性を 모색하게 됨에 따라 韓·美關係 또한 새로운 世界史的 觀點과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과 新思考가 蘇聯을 宗主國으로 한 共產主義體制의 崩壞를 가져옴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소련은 미국의 적이 아니다」라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선언했고, 戰略核武器·軍費縮小·地域安保의 문제 등이 모두 劃期的으로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東유럽 共產體制의 崩壞와는 달리 東部아시아에서는 中國·北韓·베트남 등이 그 나름의 토착적이고 民族主義的인 社會主義體制를 維持·改革하면서 전혀 새로운 뜻밖의 세계정세변화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中國·日本·蘇聯·美國의 이해관계와 세력관계가 얽힌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은 마지막 냉전의 뇌관을 제거하지 못한 채로 한민족의 궁극적 염원이 통일을 꿈꾸며 긴장완화와 關係改善에 死活을 걸고 있다.

그러나 北方外交와 南北對話의 행동반경과 전망은 필연적으로 크게는 世界史的 향방과 핵심적으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의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한반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통일과 자주를 갈망하는 한국민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하는 상호적인 물음은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있었던 反美구호처럼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인 동시에 「同伴者的 關係」를 다져가야 할 상호협력과 조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安保·軍事的 側面〉

韓半島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애초에 경제나 인권문제의 시각이 아니라 소련 봉쇄 정책이라는 세계전략에서 아시아지역의 전초기지라는 역할이었다.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은 일본 열도에 대한 위협을 막아주는 구실을 해왔다.

6.25 발발 직전인 1949년 애치슨 미국무장관이 한국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던 때나 1977년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구상했던

때와 같이 韓·美關係가 갈등을 일으켰던 때도 있었으나 韓·美 양국정부는 安保·軍事政策에서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여 왔다. 安保戰略의 문제는 韓·美關係의 핵심이었으며 그것은 「自由世界の 방어」라는 理念的 용어로 표현되어 왔다. 한국전쟁을 통한 「血盟」으로 또한 미국의 越南戰을 도운 「自由의 十字軍」으로 불리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의 세계정세의 지각변동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의미는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北方外交는 韓·蘇修交와 韓·中間 貿易代表部 설치, 공산권과의 교역량 증가를 가져왔다. 지난해에는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총리회담이 시작됐다. 北爆論議까지 있었던 북한 核開發에 대한 査察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상황에서 당연히 제기된 것이 한반도의 核武器와 駐韓美軍, 그리고 南·北韓 군비축소 문제였다. 미국은 한국내의 核武器를 同時核査察를 요구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 때 7개 육군사단과 1개 해병사단으로 구성됐던 駐韓美軍은 60년대 말까지 약 6만명선을 유지했고 닉슨독트린 이후 약 2만명이 철수하여 4만여 명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의 냉전종식과 미국의 財政赤字·貿易赤字로 인한 국방비 삭감 등 國內 政治·經濟的 요인으로 東아시아戰略은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駐韓美軍의 추가철수 계획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정부가 1990년 의회에 제출한 「21세기를 향한 미국의 東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개요」(일명 「동아시아전략 이니셔티브」)보고서에는 1991년~2000년까지 주하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3단계감축 정책구도가 나타나 있다. 1단계(91~93년)에는 동아시아 주둔군(13만 5천명, 미국 현재 총병력의 6.3%)의 12%인 비전투 지원병력 1만 4천~1만5천명을 감축하며, 이 중 50%가 駐韓美軍 1단계감축 7천명에 해당한다. 2단계(94~95년)에서는 전투병력 감축과 구조재편성을 하며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여부와 관련시켜 감축하고 重武裝한 美제2사단을 경량화한다. 3단계(96~2천년)에서는 東아시아 駐屯軍이 맡게 된다. 이 단계에서 韓·美聯合司令部의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李基琮, 「韓·美安保體制的 향방」, 「國際問題」, 92년 3월호, pp. 44-45에서)

소련의 와해와 북한 核査察 진전으로 韓·美 安保體制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감축은 더욱 촉진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증강과 주한미군 경비 부담 및 방위부담 분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外交·安保에 관해 한국의 자주성과 국가이익이 부각되면서 한·미관계는 一方的 의존관계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향해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극동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對蘇封鎖와 대북한전쟁역지라는 주한 미군의 역할은 크게 감소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핵심로 하는 韓·美 安保體制의 골격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근거는 東아시아지역의 안정 임무 때문이라고도 한다. 옛 소련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특히 경제대국에서 군사대국으로 탈바꿈하는 일본의 재무장과 김정일 체제로 권력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의 불안정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다. 나아가 미국의 국가이익에서 볼때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오늘날 무역규모로나 政治·軍事戰略의 관점에서나 유럽 못지 않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극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이익과 주한미군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점과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미군의 세계전략 안에서 이제까지 유지되어온 韓·美·日 안보체제는 北方外交나 南·北韓 關係正常化 또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주한미군이 감축된다 하더라도 극동에서의 궁극적인 전쟁역지력은 인근지역에 배치된 海·空軍 탑재 核武器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축의 의미는 줄어든다.

駐韓美軍과 韓·美 상호방위조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자주통일을 바라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도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러시아 공화국, 北韓·中國과의 관계변화와 南·北韓 關係改善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는 韓·美안보체제의 의미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貿易 葛藤〉

한국의 안보가 미국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한국정부가 그 수립부터 미국의 지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한다면 균형을 잃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어떠한 한

반도체에서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고 경제개발과 생활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韓·美關係는 安保·軍事 측면보다 經濟·貿易 측면이 클로즈업되고 있다.

경제난에 부딪친 미국은 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하나로 소꼽히는 한국에 대해 농산물 등의 수입개방과 知的所有權의 보호, 투자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한국민들 사이에 反美감정을 일으켰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총수출의 30%)이며, 한국은 미국의 6위의 수출시장(총수출의 4%)으로서 양국간 교역이 3백6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1990년도 통계). 이같은 통상규모에 따라 양국간에 국가이익을 앞세운 교역당사자로서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불가피한 일이다. 게다가 1991년부터 對美貿易收支가 赤字로 돌아서고 경제불황이 깊어지며 政治的 民主化 추세가 진행되어 쌀시장 개방이나 각종 농·수·축산물의 수입증대 문제로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물론 韓·美 兩國은 주요 무역당사국으로 國際政治·保護問題의 「同伴者」로서 뿐만 아니라 互惠的인 交易相對國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겠지만 1차산업을 희생시켜 온 공업화정책 때문에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농촌의 反美감정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韓·美 通商關係는 1980년대 초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한국전쟁 이후 전쟁복구·초기개발단계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지원에 의존하는 관계였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를 거쳐 80년대 초기까지의 고도성장을 통하여 우리경제가 매우 수출 의존적인 산업구조로 발달함에 따라 통상구조도 고도화·다양화되었다. 한국은 개방된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주요 농산물시장이 되었다.

1981년에는 無償 및 借款형태의 경제원조가 끝나고 양국간 교역이 1백억 달러를 넘어섰다. 1982년 이후에는 對美 통상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通商摩擦」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83년 컬러 TV에 대한 반덤핑 제소, 85년 美國通商法 301조에 의한 知的所有權 보호문제, 보험·영화·담배·포도주·쇠고기·통신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이 그 것이다.

韓·美關係를 「平和와 繁榮」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자 또는 「대등한 동반자」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같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호신뢰와 선의의 경

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한다. 韓·美 양국간의 안보협력관계를 현재제의 기반이며, 또한 北方政策을 포함한 우리 외교의 중심구조이므로 한반도의 냉전해소와 평화통일 노력뿐 아니라 經濟·通商 분야에서도 互惠 協力關係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崔 革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韓·美 통상마찰과 우리의 대책방안,” 「외교」, 1991년 9월호 pp. 86-87)

그러나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는 경제의 6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수출입의 적자확대로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출의 채산성이 낮고 미국 군사장비의 도입은 수입액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이 이미 극동지역의 안보를 위해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GNP의 5~6%를 방위예산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안정은 議會民主主義라는 親美體制의 요건이며 그것은 다시 東아시아 安保의 디딤돌인 것이다.

앞으로 21세기를 향하여 미국의 經濟·政治的 국내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세계적 냉전해소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中國·日本 등의 力關係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통일 이후까지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미국의 安保 전략적 가치를 안정한다면 友好協力 關係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통상압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맺 는 말 >

냉정구조가 무너지고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東部아시아지역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核心地帶」인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국제관계가 다변화하고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중시되며 한민족의 민족적 자주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한국의 安保·經濟·政治의 현실은 反美的 구호와는 거리가 멀다.

앞으로의 世界史的인 변화가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한반도에서도 마지막 냉전이 해소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침이 없이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南·北韓의 국내체제가 상당히 개혁되지 않고는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駐韓美軍과 안보공약의 문제, 통상마찰의 문제, 南北關係 正常化에 대한 미국의 배후역할 등에서 미국은 아직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安保·經濟的 유대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관계가 말 그대로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진전되기까지는 방위비분담·통상마찰·反美감정과 정치안정의 유지노력 등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